

2013. 11. Vol 225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억새꽃

한 방울 물기조차 살뜰히 다 내어주고
빈 대궁 서걱이며 야위어간 삶의 내력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탓조차 할 줄 모르는

그렇게 살아온 세월 그들끼리 보듬으며
가끔은 가을꽃으로 누군가에게 안겨질
감직한 희망을 위해 은빛 머리 빋고 있다.



김윤희

· 월간문학 수필등단
· 한국문협 · 진천문협 ·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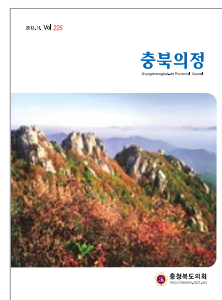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3. 11. Vol 225

Contents

- 04 통합 청주시 예산확보 위해 '전방위 노력'
- 05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문
- 06 제323·324회 임시회
- 07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 요구
- 08 토론회·연구용역 보고회
 -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관련 정책 토론회
 - 도지정 유형문화재 관리·개선방안 토론회
 - '학교 숲' 활성화 방안 연구
- 10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17 대집행부 질문·답변
- 23 5분 자유발언
- 26 주요 처리의안
- 28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속리산

한국 팔경 중 하나인 속리산은 1,057m의 높이로 높은 봉우리와 계곡이 빚어내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최고봉인 천왕봉, 관음봉, 문장대, 신성대 등 고봉이 있고, 법주사 등의 문화유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 발행일 2013년 11월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F A X (043) 220-5119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전화 (043) 220-5123



▲ 충청북도의회는 10월 1일 청주시·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 시·군협의회, 군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함께 국무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위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통합 청주시 예산확보 위해 ‘전방위 노력’

도의회, 총리실 앞 기자회견 · 본회의서 건의문 채택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 정부 지원약속 이행 촉구

충청북도의회(의장 김광수)가 청원·청주 통합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 9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선공약과 당초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 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국비를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은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예산으로 행정정보시스템통합 사업비 115억원,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76억원, 청사정비·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 69억원 등 직접경비 260억원을 요청했었다.

이처럼 정부가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도의회는 지난 10월 1일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군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 총리

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주청원 통합이 충북발전의 옥동자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16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충북지역 최우선 사항으로 확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선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를 비롯한 참여 기관들은 “지자체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날 국무총리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면서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통합은 사실상 어려우며, 주민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조를 요청해 통합 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합 청주시 출범 필수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당, 정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청주시 예산 확보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문

통합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통합 사업비 115억원,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76억원, 청사정비·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 69억원 등 직접경비 총 26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통합은 사실상 어려우며, 주민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로 인식하여 정부는 앞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됨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과 정치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박근혜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조를 요청해 통합 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청원·청주 자율통합을 이뤄 낸 충청북도민을 존중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필수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충북도민의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160만 충북도민의 저항과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등 의결

지역현안 대집행부질문… 9대 의회 의정활동도 점검

제323·324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김종필·임헌경·정지숙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에 이어 정현·권기수·유완백 의원이 5분 발언이 있었으며 전체의원 연찬회도 가졌다.

개회 첫날인 9월 3일 실시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김종필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과 소방본부 관련사항, 임헌경 의원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과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정지숙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이행과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등을 따졌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은 강원도에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서 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 방향과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는 11월 정례회기에 시행 예정인 「2013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위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 지원 건의문」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문」 등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지역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전달했다.

이어 도의회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심기보·이광희·이수완 의원이 각각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했으며 장선배·최미애·김재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대집행부질문에서 심기보 의원은 평생복지, 기초노령연금 비용, 무상보육 예산 대책을 따졌고 이광희 의원은 학교비정규직(학교직원) 직종통폐합, 불합리한 고용 및 처우,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 이수완 의원은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 청주·청원 통합예산 지원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 요구

도의회, 건의문 채택해 청와대 · 국회 등에 발송

정부의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으로 청원 · 천안 · 세종시 기능지구가 유명무실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회가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324회 임시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발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월 30일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가졌으나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충청도민들은 다시 한번 크게 실망시켰다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

성 종합대책’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도의회는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과학벨트 특별법에 관련근거를 신설해야 추진될 수 있다’는 미래부의 입장 표명은 책임 회피용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미래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안의 ‘기능지구 비전 및 목표’에는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 근거를 마련해 과학산업도시로 육성하고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과학벨트 특별법에 관련 근거 신설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미래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지난 9월 25일 충청도청에서 열린 ‘과학벨트 자치단 체장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충북도 등이 요구한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했음에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는 국토부 소관이라서 부처 협의를 마치지도 않은 사항을 발표할 순 없지 않냐”라며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책임회피용에 불과한 것으로 기능지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60만 충청도민을 대표하고, 기능지구로 지정된 충북 청원군 · 충남 천안시 · 세종시 등 충청인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정부

와 국회 등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거점지구의 연구 결과물을 응용화 ·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기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2013년 10월 1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한목소리

교육위 정책토론회, 교육감 직고용 여부에는 의견 상충



▲ 10월 21일 도청회의실에서 '충청북도 학교직원 교육감 직고용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가 10월21일 도청 회의실에서 학교직원(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학교직원(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광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 박문희 도의원, 김미경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 권두섭 여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세경 충북도교육청 사무관, 신용수 노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기형 교수는 '학교와 비차별적 모습 살이'를 주제로 발표하고, 학교직원의 교육감 사용자성 확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직종통합'은 '교원업무경감대책'과 '학교비정규직대책'을 무리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염려된다고 분석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법적근거를 들어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지적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직고용 조례를 통해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엄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미경 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조건 및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감 직고용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이 분명한 역할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문희 의원은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문제가 해결되고 천차만별인 근무조건이 체

계화 되도록 불필요한 소모전을 멈추고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오세경 사무관은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에 앞서 정 부차원의 학교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 방침,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확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사용자'의 정의를 근거로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것과 교육감이 학교직원의 임용권한이 있다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학교 숲' 효과 높지만

교육위원회, 연구용역 바탕으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의 연구용역 결과 학교 숲의 효과가 높지만 인식도가 낮으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회는 10월 7일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연평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발주한 '충청북도 학교 숲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는 충북도내 초·중학교 14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숲 면적과 형태, 교목과 교화, 수목명찰 및 해설판, 학교 숲을 활용한 학습활동 현황 분석 ▲학교 숲이 잘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수사례 분석 ▲학교 숲이 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 도내 초·중학교의 학교 숲 면적은 전체적으로 학교면적에 비해 적은 편이었고, 초·중학생 모두 학교 숲이 많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숲 활용 측면에서는 초·중학교 모두 학교 숲을 활용한 전문 학습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학생들도 학교 숲이 학습공간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학교 숲의 효과분석에서는 초·중학교 모두

“문화재 보존에서 창조적 활용으로 전환을”

행정문화위 토론회, 효율적인 보존·관리·활용방안 추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0월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재)충북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도 지정(유형)문화재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6월 ‘도지정 문화재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충북문화재연구원에게 의정학술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술용역의 중간보고를 겸한 것으로 심기보 도의원, 손태진 행정문화위원장, 교통대 교수, 김정희 충북문화재연구원 팀장, 김규상 경



▲ 10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정(유형)문화재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도 학예연구관, 연복흠 충북문화재지킴이 대표, 김인동 충북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 조혁연 도문화재 전문위원, 정기범 충북학예연구사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손태진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심기보 의원의 ‘도지정문화재 관리실태와 개선방향 마련의 필요성’ 주제 기조강연에 이어 김정희 팀장이 ‘충북도지정문화재 관리실태 현황과 분석’을, 김규상 학예연구관이 ‘경기도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 현황과 활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손태진 교수는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문화재 관련법이나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현장에서 문화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문제점을 발견, 충북의 특성을 살린 문화재 관리 메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위한 법이나 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문화재 담당 연구 인력과 예산확보, 문화재 보존정책 중심에서 창조적 활용 정책으로 전환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또 충북도의회에서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주변에 있는 도지정문화재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활용 안된다

숲 조성 확대 계획

학교 숲의 면적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학교 숲이 학생의 환경감수성 및 교육관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는 학교 면적이 클수록 자연환경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 환경파괴나 오염에 대한 인식요인 측면에서 환경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필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향후 학교 숲 조성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꼼꼼히 검토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 10월 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숲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23·324회 임시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중)는 제323회 임시회 회기 중 2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현안 간담회와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9월 3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집행부질문 시기에 대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진행되었던 간담회에서는 김동환 의원의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역할 부조화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노광기 의원의 외 5명이 제출한 ‘충청북도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연구’에 대한 의원 연구활동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9월 11일에 개최한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대집행부질문, 주요사업현장 방문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 2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10월 7일 개최된 제324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2건을 의결하고 11월 22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기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월 17일에 개최한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201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사」 및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대집행부질문,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진행되었던 간담회에서는 임현경 의원의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가 이루어졌다.



▲ 10월 7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23·324회 임시회

도민 체감하는 복지인프라 확대 노력



▲ 10월 10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재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향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청북도 향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는 결핵환자의 성실한 투약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를 위해 1982년 제정된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향결핵제를 투약하는 결핵환자들에게 1인당 월 2천원의 보급수수료를 징수해 왔다.

하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와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에 환자에게 보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과 모순되고 2012년 기준 보급수수료 징수액이 도내 총 1,232,000원으로 시·군 평균 102,500원에 불과해 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동조례안은 변화된 사회 환경과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부응하고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도민복지 증진

에 앞장서기로 했다.

그리고 제324회 임시회기 중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10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최미애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신체적 기능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노광기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는 등 모두 8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10월 10일에는 재건축 공사 중인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을 방문해 철저한 공사감독을 당부하고 자연학습원이 학생 수련시설로만 활용되지 않고 도민 행복연수원으로 재탄생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23·324회 임시회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촉구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23회 임시회기 중 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 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통합 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는 주민공모 및 여론조사와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주민 자율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 점과 인구, 면적, 지역의 역사성, 주민생활의 접근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한 4개구 설치 계획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도내의 강·계곡 등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대형사고 발생 시 모든 상황을 통제·관리하는 안전상황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제324회 임시회기 중인 10월 15일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원·청주 통합은 충북발전의 옥동자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반드시 통합청주시 출범비용은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청주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통합 사업비 115억 원,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76억 원, 청사정비·재배치 및 임시 청사 건립비 69억 원 등 직접경비 총 260억 원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전액 반영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다.



▲ 9월 3일 소관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의사일정 및 당면사항을 협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23·324회 임시회

과학벨트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요구



▲ 9월 3일 농정국과 '2014년 신규사업 간담회'를 갖고 신규 예산반영 사업설명을 청취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현)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도내 낙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어려운 농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농정국과 간담회를 열어 2014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충북도의 친환경 농업의 발전방향과 '2015과산유기농엑스포'에 접목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

문」 채택과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를 위한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심사 의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은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모든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종합대책에 명시함은 물론 산업단지 면적을 구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윤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수정과 기금심위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또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자료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23·32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김종필·임현경 의원의 대집행부질문과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종필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에서 '119지역대 재배치와 통폐합', '3개 소방서 신설' 문제 등 다양한 소방시책들에 대해 관련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질의하고 소방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시책추진을 주문했다.

임현경 의원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충북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9월 4일에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안과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충청북도 소방인들의 축제인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현지를 방문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뷰티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동 조례안은 '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전문 인력 양성과 뷰티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등을 지원하고 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등을 통해 충청북도 뷰티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앞으로 뷰티산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0월 15일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가족, 다문화가족, 소방 관련학과 학생 등 2,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각 시·군 캠프를 방문하며 관계자와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9월 3일 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와 간담회를 갖고 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교육위원회

제323·324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 9월 4일 충주시에 위치한 (가칭)삼원유치원 설립 예정지를 방문해 충주교육지원청 관계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위원회를 열고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삼원유치원 설립 계획 변경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제정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고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학교 내 환경관련 동아리나 체험학습 및 환경시범학교 운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칭)삼원유치원 설립 계획 변경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주지역을 방문하여 변경된 유치원 예정 부지를 시찰했다.

그리고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8일과 10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연초에 계획한 사업목표가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과제인 ‘학교 숲 조성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숲 조성 및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당부했다. 또 토요일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한글 바로알기 교육의 지속추진 및 언행 등 실천중심 인성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청주 중·고등학생의 음주·흡연율이 전국 2위인 점과 제천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설 및 CCTV 화소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중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 청원청주통합지원
특별위원회
제323·324회 임시회

적극적인 통합예산 확보대책 요구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2013년 9월 9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을 방문해 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청원청주통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청원청주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4개 구 구역확정 및 청사위치선정, 통합청주시 조직설계 및 인사기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통합시 예산편성 및 기금통합, 통합청주시 비전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 임시청사 확보, 초·중학교 학구조정 등 통합 청주시 출범준비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또한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 준비를 위해 고생하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근 의원은 통합청주시 인사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통합 시 출범 전 인사안 마련 시 인사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인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 조정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통합 시 출범과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철저한 예

산확보 대책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도경 의원은 4개구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과 관련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통합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조정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통합 시 출범과 함께 불합리한 읍면동 경계 조정을 한꺼번에 추진하여 조직설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설계 운영을 당부했다.

최미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통합 청주시 출범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통합추진위원회 및 시·군민협의회 등과 함께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이룬 통합 청주시가 신수도권의 거점 명품 청주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청주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9월 9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을 방문해 통합청주시 출범 준비상황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19지역대 통폐합과 소방서 신설 문제

김종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119지역대 통폐합 관련

[질문] 119지역대에 대한 재배치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종전 119지역대에 한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 소방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 3교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어 지역대를 재배치 및 통폐합했습니다.

[질문] 현재 통폐합된 곳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 통폐합된 곳은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어, 일종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19지역대 84개 중 28개 지역대가 현재 무방비상태입니다. 이 28개 지역대는 주로 산골 오지마을인데 이런 마을들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본사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또 비상소화전함도 일부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의용소방대가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의용소방대를 한꺼번에 모두 전담의용소방대로 바꿀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예산문제와 인원문제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폐쇄된 지역들은 인구는 적지만 보다 많은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주민들의 소방 수요와 소방공무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고려하여 만든 것이 재배치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는 계속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2011년도에 3교대인력 확충을 위해 소방공무원 135명을 확보해야 함에도 확보하지 못한 어떠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답변] 2010년도에 일반직은 41명을 감축시키고, 소방직은 135명을 증원했습니다.

2011년도에 소방직을 또 135명을 증원하는 것은 일반직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어 그 당시 135명을 다 늘리지 못하고 4명만 증원했습니다.

[질문] 지역대는 통폐합하면서 3개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행정인력 보다는 현장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신지요?

[답변] 지역대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다만 단양의 숙원사업인 소방서 신설을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어 그 수요에 맞춰서 지역대를 통폐합하는 대신에 소방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방서 신설 관련

[질문] 충청북도가 요구한 소방서 신설부지인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일원을 소방서 용지로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의회에서 부지확보를 한 후 신설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과정 중 한군데가 그런 것이며 대체 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단양소방서가 졸속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까?

면적을 보면 다른 지역 소방서 부지 면적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대형 소방차들이 회전할 수도 없는 이러한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 단양 주민들은 제천소방서에서 단양까지 이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 제대로 된 소방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양에 소방서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단양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우선 단양읍내에 있는 119센터를 활용해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로부터 자리가 너무 비좁다는 지적을 받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보다 더 넓은 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책 촉구

임헌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질문] 당초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제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2004년도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소방공무원들이 그 소송을 계기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지난 2012년 5월 9일 법원 1심 판결이 났는데 판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 충북도 소방공무원들을 원고로 하여 원고승소로 판결이 났고 초과근무수당 소송 제기 대상자 908명 중에 26%인 231명만 소송을 제기해 69억 5,000만 원을 가지급 했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며,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충청북도는 '제소 전 화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소송을 잘못 제기하면 소송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또 비 간부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간부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기하지 말랬다고 제기 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질문]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초과근무수당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소송 제기자들이 1심 판결을 받은 230명에게 69억 5,000만 원을 작년 5월 14일자로 선 지급을 했으며 소송 미제기자가 592명, 소송 포기자가 85명입니다.

[질문]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도 타 시·도의 경우는 시·도 지사의 용단에 의해 과감히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용단이나 결단을 내리실 의의가 있으십니까?

[답변] 현재 이 분야는 서울시에서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사태 추이를 보아가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년 뒤일지도 모르는데 무한정 기다리며 옆 사람과 갈등구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물론 그것을 갈등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갈등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 미제기자들도 소송 제기자가 승소를 해서 수당을 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다만, 미제기자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느냐 나중에 지급하느냐 그 선후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질문] 오송역세권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절차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의 기대에 반하는 사업지연과 사업부진의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급적 정상추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에 실패한다면 도지사님께서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직 그러한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으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활성화 · 교향악단 처우개선 주문

정지숙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도지사 공약추진 관련

[질문] 공약 이행사업 중 중장기적으로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공약사업을 보다 발전·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유일의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중지를 모아 모범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천의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질문] 충북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북문화재단은 연간 300여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며 선진 문화사회를 구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예술 전문 인력양성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에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질문] 현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총액인건비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환 인력의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해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질문] 올해 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 발표 시 도청 청소업무 근로자를 2014년에 무기 계약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한 청소요원의 정규직화를 위해 어떤 작업을 추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청소요원의 무기계약 전환여부 결정을 위해 전환 시 장·단점과 타 지자체 사례, 소요예산 등을 종합 검토해 금년

말 전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무기 계약직 전환이 결정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향후 무기 계약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줄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 응대요령 등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정시책이나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무기 계약직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 가능한 선에서 부서재배치를 시킬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보수원 등 특수한 업무수행자를 제외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순환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관련

[질문] 인사시스템의 투명한 공개와 중지된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할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09년 8월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부전산망을 통해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과 인사원칙, 기준 등을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11개 시·군이 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부활에 찬성·공감하고 있어 내년부터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운영 및 처우 관련

[질문] 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해서 단원 충원 계획과 복지향상에 대한 정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우수단원을 증원해 정규 교향악단의 체계와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적정 급여체계 개선과 급량비 지급, 비상임단원의 상임화 등 처우개선 대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상보육·무상급식 재정부담 해결 촉구

심기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복지재정 급증에 대한 대책

[질문]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원칙을 중시하시는데 연금, 보육, 의무교육에 따른 급식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입니까?

[답변] 헌법정신에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국가사무로 인해 기초연금 535억 원, 무상보육 730억 원, 무상급식 465억 원으로 총 1,7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방비 부담분으로 충북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담이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질문]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면 그 만큼의 예산이 충북도의 시민과 그들 진 곳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비용문제

[질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인원과 예산규모는 얼마인지요?

[답변] 기초노령연금 지급인원은 15만 7천명이며 총 예산규모는 1,700억 원입니다.

[질문]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사항인 기초연금을 '14년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께서 공약을 깬 것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수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14년 총 소요액과 이중 지방비는 얼마인지, 올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국비 2,152억 원, 지방비 535억 원입니다. 지방비 부담액은 '14년 535억 원으로, 198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다른 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자원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 스웨덴, 캐나다, 호주는 전액 국세이고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은 국세와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원을 확보합니다.

[질문]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기초연금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나

라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해결책이 있나요?

[답변] 기초연금에 따라 추가되는 198억 원에 대해 전액 국비로 부담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습니다.

무상보육·급식 예산문제

[질문] 무상보육비로 지방비가 '12년에 792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13년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해 충청북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지방비가 930억 원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대통령 공약사항에 이행 따른 138억 원의 추가분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질문] 우리 충북도가 가장 먼저 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투입된 예산이 2011년 340억 원, 2012년 430억 원, 2013년 465억 원인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답변] 다소 재정적 부담은 되지만 가치있는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의무교육 무상화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초, 중학생의 무상급식에 관련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답변] 헌법에 명시된 만큼 무상급식 소요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2013년 충북도의 가용재원은 약 2,0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취득세 인하 등으로 충북도의 가용재원은 계속 감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생색은 내면서, 지방재정은 철저히 졸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노인기초연금 535억 원, 무상보육 730억 원, 무상급식 465억 원은 국가 사무로서 국가에서 100%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매년 1,730억 원이 충청북도에서 읍지에서 멀고 있는 이들과, 그늘진 곳에 쓰여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 ·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 제기

이광희 의원 (교육위원회)



학교비정규직 직종통합 관련

[질문] 올해부터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발명교실실무원, 교무실무원에 대해 교무실무사로 직종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도교육청의 학교직원 등의 장단기 인력 운영계획에 따르면 직종 통합을 2013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배치기준 대비 현원과 부족 학교의 인력재배치를 2014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기준 배치인원은 793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859명입니다. 이는 현재 근무인원이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은 현 임지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고 결원이 발생한 학교가 있으면 인근 과원인 학교에서 재배치하게 됩니다.

[질문] 타 지역에서는 보통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강제통합이 아닌 자율성을 부여하며 인력감축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준비 없이 서둘러 진행된 직종통합정책은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보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의 직종통합정책 관련해서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공약으로 초등학교 6학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을 축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그동안 학교 간, 시·도 간 서열화 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충북에서는 다시 4~5학년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십니까?

[답변] 3월달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년말에 어떻게 학

력이 향상되었는지 판별이 필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려가 된 서열화를 없애고 학교 자체로 검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질문]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의견청취를 하셨나요?

[답변] 시행과 관련해서 교육장 회의, 학교장·교감, 연찬회,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질문]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중요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공청회를 열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012년도 수능 1~2등급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충북은 수능 1~3등급이 전국 최상위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1~2 등급이 추락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요?

[답변] 먼저 우수 중학생들이 타 시·도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했습니다.

우수 중학생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와 충청권에 영재고 지정 등을 추진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 지난 4일 전국체전 발대식에 교육감께서 불참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교육관련 다른 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교장선생님들도 불참하였는데 교장선생님들에게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답변] 그런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이 당장 선거이고 교육감의 선거참여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기본적 가치이자 핵심가치입니다. 부디 충북교육계가 정치적 휘둘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역세권 · 취득세율 인하 대책마련 요구

이수완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오송역세권 개발 관련

[질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충북도의 노력과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선5기 들어 2010년 8월 오송 제2산단과 역세권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 물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는 등 본격적인 추진으로 2012년 12월 149만평 중 2/3에 해당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100만평)는 어렵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토지보상(73%)을 진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역세권개발(49만평)은 부동산 경기 침체, 기형적인 지가상승 등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여 민자유치가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질문] 충북도는 오송 역세권도시개발사업 보다는 낙후된 시·군에 균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워져 도에서는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1,100억 원 정도를 출자하여야 하나 쉬운 일이 아니고 출자를 한다면더라도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로 보아 안행부의 사채발행 승인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도민 전체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에 100% 공영 개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지표인 균형발전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6개 군을 감안할 때 오송역세권을 100% 공영개발 하기란 도민정서상 쉽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민들은 오송바이오밸리 전체가 무산되는 우려를 표명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내에 역세권이 차지하는 비율

은 핵심영역(①영역 : 오송1·2산단, 역세권, ②영역 : 오송읍 일원) 800만평(2,645만㎡)의 6.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역세권에 배치하고자 했던 역세권의 일부기능(의료관광, 컨벤션, 백화점 등)은 우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로 이전 배치하여 그 기능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 관련

[질문]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세수 감소분의 전액 국비보전 요구와 향후 조세체계 개편 및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정부의 세수보전 대책은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8%로 3% 포인트 인상하고 부족분은 정부예산의 예비비로 보전하며, 2015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여 지방 세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을 정부에서 제시한 11%보다 5% 포인트 많은 16%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연계 공조하여 관련부처에 요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 · 청주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

[질문] 통합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충북도는 정부에 행정정보시스템통합 사업비 115억 원을 요청했으나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임시청사 확보비용도 금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예산심사 시 국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송역세권 청주시·청원군이 자체 해결을

현 정부 들어서 지방 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불균형을 확대시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불균형 격차와 같이 우리 충북도에도 도청 소재지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최근 청주권에서는 오송역세권 개발에 충북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 충북도가 공영개발을 하여야 한다, 충북도가 직접투자를 해야 한다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소외지역 도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민선3기 이원 중 지사 때 오송 신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선4

기 정우택 지사 때 청원군 기본계획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9년 10월 오송 제2단지 추진계획을 변경해 역세권개발을 분리하였으며, 민선5기 이시종 지사에 이르러 오송역세권개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오송역세권과 같은 지역문제는 당연히 청주·청원권에서 자체 해결해야 하고 충북도는 청주·청원권에 대한 투자를 중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이제 오송역세권 개발에서 눈을 돌려 그동안 홀대받고 낙후되었던 남부권과 북부권의 투자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완백 의원

식량주권 지키기 위해 농업예산 비율 높여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장려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인의 고령화 가속, 국가 간 FTA 체결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농업예산을 삭감할 예정에 있는데 농림예산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1조3천억 원씩 총 5조2천억 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충북도의 농업예산도 정부의 행태를 닮아가는 것 같은데, 결산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충북도의 전체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은 2009년 2조6천77억 원 중 농업예산은 4천80억 원으로 15.6%를 점유했는데 이후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2012년은 2조9

천628억 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농업예산은 12.7%인 3천777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의 예산이 매년 증가함에도 4년 만에 2.9%의 농업예산이 감소했는데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농업예산을 단순히 희생양으로만 돌려막기 식으로 그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농업을 고사시키는 행위로 농업은 전 국민의 생명산업임을 명심하시어 충북도의 농업예산 비율을 높이는데 도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헌 의원



충북도 균형발전 예산비를 높여라

균형발전은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가치로 함께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줄곧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도내 각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고 도민이 잘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청주와 청원에 인구 51%, 제조업 35%가 집중되어 있고 내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 그 집중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주·청원지역에 지속적 투자가 계속됨에도 오송역세권까지 충북도가 나서서 개발할 경우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한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청주·청원의 지역적 문제인 오송역세권 개발을 충북도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균형발전

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어불성설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도정의 핵심과제 중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낙후된 제천, 단양, 괴산, 증평 그리고 남부3군 등 7개 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비율을 충남과 전북처럼 10%로 상향하여 예산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북부권·남부권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제시한 과제 내용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바랍니다.



권기수 의원

도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충북도의회가 올해 시행한 「충북도민 행복정책개발」 연구에서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민들의 행복감은 소득향상과 물질적인 성장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 위주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정 핵심 전략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주민 행복 및 삶의 질 평가지표의 재설계가 요구됩니다.

현재 평가지표는 경제적·물리적 부분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뿐입니다. 비경제적·심리적 부분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롭게 완공되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을 '(가칭)도민행복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이 그 동안 담담해 온 환경교육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포괄하면서 연수대상을 가족, 단체 등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행복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충청북도의회가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토론회에서 제안한 △행복교육원 설치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및 문화 컨설팅 프로젝트 △주거안정을 위한 해피 하우스 등의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장선배 의원

도의회 의원들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하며

최근 대집행부질문과 관련해 일부 의원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신분으로서의 실망스러운 행동과 도의회의 기능이 저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은 최종 10명의 의원이 신청했고, 이는 평소 신청의원수 보다 훨씬 초과한 인원으로서 모두가 질문할 경우 회기연장 등 의사진행에 차질이 예견되어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의원의 수를 5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정당·질문대상기관·상임위원회별 안배와 최근 질문의원, 여러 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다음 기회에 질문하시도록 하고 질문횟수가 적은 의원님을 선정해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협의·결정된 사항을 불복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대집행부질문을 취소하고 항의농

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집행부 질문은 의회에 부여된 중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스스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다른 동료의원의 대집행부 질문의 기회마저도 박탈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의회가 대립과 반목의 장인 것처럼 비춰지고, 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방치한 채 싸움이나 벌이는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김재종 의원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

대집행부질문과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행동과 기자회견 등의 항의시위가 이어진데 대해 심히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북도의회는 순수한 풀뿌리민주주의는 온데간데없고 민생중심주의는 훼손되어 대립하고 반목하는 중앙정치, 싸움하는 국회를 흉내 내는 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많아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의원이 질문을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두 분의 의원이 이미 결정된 도정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당리당략적이며 민주당 흠집내기입니다.

타협·설득하고 서로 양보하며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

깝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을 적극 배려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북도의회는 의원들만의 의회가 아닙니다. 진정성을 갖고 섬기는 자세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께 보답해야 할 자리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타협해 이번 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염원하며, 이후 이런 정쟁을 막는 방법에 대해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최미애 의원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23회 임시회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봉희 의원)

-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규정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정하고,
- 신규위임 대상사무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현 의원)

-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기보 의원)

- 최근 논의가 활발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를 NGO센터의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 NGO의 사업에 사회적 경제 영역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청원·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마련하고, 청원·청주통합추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승인 신청하기 전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황규철 의원)

-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항결핵제의 무료 제공에 따른 투약의 불성실이 우려되어 보급수수료(1개 월 2,000원)를 징수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3년부터 직접복약확인 치료 사업을 실시하여 결핵환자의 투약여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현 의원)

-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베트남 빈곤통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양 지역 간 교류 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 되어,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강현삼 의원)

-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삼원초등학교 부지내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입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립(단설)유치원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분리하여 설립하고자 함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희 의원)

- 학생들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및 고등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신성장 동력사업인 뷰티산업을 우리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진 의원)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가칭)삼원유치원 설립예정지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목적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제324회 임시회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노광기 의원)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68조에 따라 신체적 기능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양희 의원)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노광기 의원)

-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신속한 농산물 대응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상재해보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체 및 신소득 고온성 작목의 생산기술 선점을 위하여 신규 시험연구포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미애 의원)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과선중학교와 과선북중학교가 각각 남학교, 여학교로 운영체제를 변경함에 따라 학구를 통합하고 진천읍성 혁신도시 내 (가칭)분성중학교 개교에 따라 분성중학구를 설정하며 사군 행정구역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중성 의원)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보은군이 대국민 산림 휴양·치유, 체험시설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림과
- 우리 도가 산림자원 조성에 적합한 보은군유림을 교환하여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요구 하며,
-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손문규 의원)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 투명성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신성장 동력사업인 뷰티산업을 우리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성욱 의원)

-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농민단체 명칭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미애 의원)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병윤 의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자립장학금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의정 활동 이모저모



◀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1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충북대표로 출전한 펜싱선수단을 격려했다.

충청북도의회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 강원도 속초 대명콘도에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갖고 의정비 동결 결정과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 등 현안을 협의했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10월 15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2014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4일 '2013 천안국 제철방식품엑스포'장을 방문해 유기농 관련 제품을 살펴보았다.





▲ 10월 24일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자매결연 지역인 충주시 양성면 모점마을을 방문해 농촌 일손을 도왔다.



▲ 김광수 의장이 10월 30일 중국 북경 외교학원 초청으로 본 대학을 방문해 외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한·중 관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에게"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있다.



▲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9월 10일 노인복지시설인 '소망의집'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담을 나누고 있다.



▲ 충청북도의회는 9월 25일 청주 세광중학교와 제천중학교 학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 김광수 의장 및 사무처 직원들이 9월 16일 청주 북부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임 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무유(無有)보다 불균(不均)이 더 두렵다”

— 지방자치는 지역균형발전 —

중국의 격언에 ‘무유(無有)보다 불균(不均)이 더 두렵다’라는 말이 있으며,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백성의 불만은 불과(不過)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균(不均)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30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낙후지역인 영동군을 대변하고 영동군의 발전과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책무감 속에 도의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지 8년이 지났다.

그리고 영동군의 발전과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은 요원한 것 같다.

충북은 인구 160만 시대에 접어들며 정부 예산 4조원 시대에 접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원·청주 자율통합,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민선5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이 잊지 말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대전제가 있다.

그것은 160만 충청도민, 아니 5천만 국민의 합의를 거쳐 이 시대의 가치로 공감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이다.

현재 청주·청원권의 총 면적은 967제곱킬로미터로 도 전체면적의 13.0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82만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52.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군 지역은 72.82%의 면적으로 시지역보다 3배나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또한 산업시설의 60% 이상이 청주·청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 도에 있어서는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임과 동시에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한 보다 균형발전전략을 시급히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충북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주·청원의 집중된 발전이 아니라 충북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다.

특히 2010년부터 보은, 증평, 괴산, 단양 등 낙후지역의 도의원은 ‘인구 상하한선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역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수마저 줄어들어 지역균형발전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방자치와 역행하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충북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도의회가 되어야 한다



박 문 희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어느덧 2013년 10월이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으로 도의원이 된지도 벌써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지방의원은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주민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모든 도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 또한 부여받게 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365일 중에 주말, 명절을 제외한 대부분을 의회에 출근해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각종 민생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열심히 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 문제이다.

의원보좌관이란 지방의원들의 입법정책 보좌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에게 1명의 보좌관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방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이 있어 사무보조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물론 현재의 전문위원실이 정책결정과 입법지원 기능 등 상당히 많은 보좌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의원개인보좌관을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중 대표적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대집행부질문 등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도정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정활동 지원제도만으로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문화, 세분화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특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사항이 빗발친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의무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에도 벅차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반드시 의원개인보좌관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입법정책보좌관제'와 같이 전문위원실이 아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선의 대책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지방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충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 많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 다양한 보좌 인력을 활용한다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은 멀지 않은 시기에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

9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후회하지 않는 지방의원으로서 남기위해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매진하여야겠다.

결국 지방의원은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주민들이 인정하는 지역의 일꾼이 될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